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보고서

2016. 10.

Contents

제1장. 조사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2. 조사 설계	2
3. 조사 내용	3
4. 응답자 특성	4
5. 참고사항	5
제2장. 주요결과	6
1. 언론보도 이용 행태	7
2.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7
3. 복제기사 관련	8
4. 기사댓글 피해 관련	8
5. 위원회 이용 의사 관련	8
제3장. 조사 결과	9
1. 언론보도 이용 행태	10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10
2) 언론보도를 주로 접하는 매체	12
3)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 대응법	14
4) 인터넷 기사 및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16
5)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방법	18
2.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20
1)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20
2) 침해배제청구권 필요성	22
3) 침해배제청구권 중재위 조치 필요성	24

Contents

3. 복제기사 관련	26
1)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26
2) 복제기사에 대한 중재위 조치 필요성	28
4. 기사댓글 피해 관련	30
1)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30
2) 기사댓글 피해구제 중재위 조치 필요성	32
5. 위원회 이용 의사 관련	34
1)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	34
2)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있는 이유	36
3)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38
6. 위원회 관련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	40
부록. 설문지	42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①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② 조사지역	▪ 전국
③ 조사방법	▪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④ 표본크기	▪ 1,000명
⑤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별 인구수를 반영한 비례배분
⑥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pm 3.1\%p$
⑦ 응답률	▪ 17.9%
⑧ 조사기간	▪ 2016년 09월 23일 ~ 2016년 09월 27일
⑨ 조사기관	▪ (주)리서치랩

3 조사 내용

구분	항 목
언론보도 이용 행태	▪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 언론보도를 주로 접하는 매체 ▪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 대응법 ▪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 방법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침해배제청구권 필요성 ▪ 침해배제청구권 중재위 조치 필요성
복제기사 관련	▪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복제기사에 대한 중재위 조치 필요성
기사댓글 피해 관련	▪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기사댓글 피해구제 중재위 조치 필요성
위원회 이용 의사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 ▪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있는 이유 ▪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	▪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

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빈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6)	49.6
	여자	(504)	50.4
연령	20대	(162)	16.2
	30대	(184)	18.4
	40대	(210)	21.0
	50대	(204)	20.4
	60대 이상	(240)	24.0
거주 지역	서울	(199)	19.9
	인천/경기	(296)	29.6
	대전/충청	(103)	10.3
	광주/전라	(102)	10.2
	부산/울산/경남	(158)	15.8
	대구/경북	(100)	10.0
	강원/제주	(42)	4.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2)	12.2
	고졸	(248)	24.8
	대졸	(500)	50.0
	대학원졸 이상	(109)	10.9
	무응답	(21)	2.1
직업	자영업	(134)	13.4
	판매/영업/서비스직	(71)	7.1
	생산/기능/노무직	(49)	4.9
	사무/관리/전문직	(409)	40.9
	주부	(179)	17.9
	학생	(44)	4.4
	기타/무직	(105)	10.5
	무응답	(9)	0.9

5 참고사항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전체 합이 100%에서 $\pm 0.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복응답의 경우 전체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기항목은 '기타'로 묶어서 제시하거나 생략함. (그림과 차트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제시)
- 집단 간 비교 분석에서 사례수 10개 미만은 표본수 부족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제2장

주요 결과

▶ 주요 결과

1 언론보도 이용 행태

-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잘 알고 있다’ 5.3% + ‘들어본 적은 있다’ 46.7%)는 52.0%로 나타남.
- 언론보도는 ‘방송’(47.8%)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포털’(20.2%), ‘인터넷신문’(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4명(41.5%)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는 소극적 응답을 보임.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응답은 19.5%로 나타남.
-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였음.
-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42.1%)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 삭제’(24.9%), ‘손해배상’(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 인터넷 기사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80.3%)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89.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함.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침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82.0%)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2.8%에 불과함.

3 복제기사 관련

- 복제기사(잘못된 언론 보도가 카페, 블로그 등으로 전파·게시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6.1%로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 복제기사에 대한 일괄적인 피해구제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4.6%의 응답자가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2.6%에 불과함.

4 기사댓글 피해 관련

-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8.3%로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함.
- 기사댓글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90.6%)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부정적’ 의견은 1.2%에 불과함.

5 위원회 이용 의사 관련

- 잘못된 언론보도와 함께 원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에 전파된 경우 또는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7.8%의 응답자가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7.0%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 같아서’가 4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절차가 간편할 것 같아서’(40.5%)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조정은 실효성이 없어보여서’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27.1%)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제3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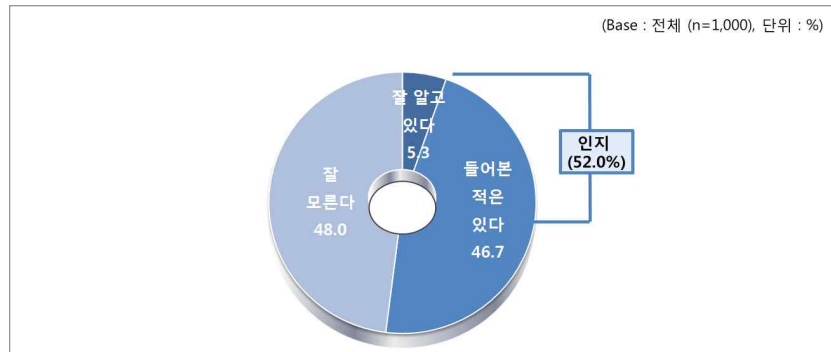
1 언론보도 이용 행태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Q 귀하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잘 알고 있다’ 5.3% + ‘들어본 적은 있다’ 46.7%)는 52.0%로 나타남.

【그림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강원/제주’(64.3%), ‘서울’(58.3%)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인지			비인지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52.0	5.3	46.7	48.0
연령	20대	(162)	22.2	1.2	21.0	77.8
	30대	(184)	47.8	6.0	41.8	52.2
	40대	(210)	65.2	4.3	61.0	34.8
	50대	(204)	70.1	10.8	59.3	29.9
	60대 이상	(240)	48.3	3.8	44.6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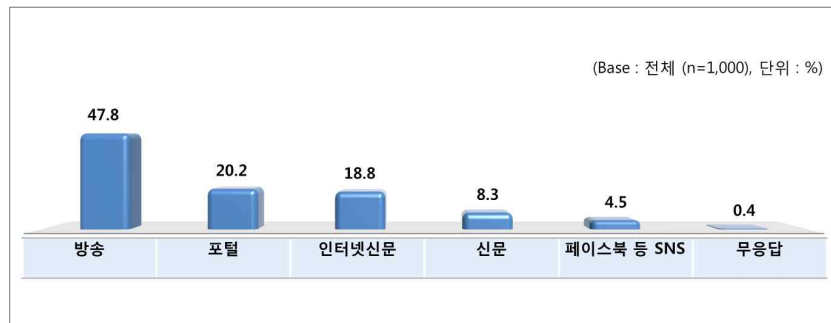
(명, %)		사례수	인지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52.0	5.3	46.7	48.0
성별	남자	(496)	52.2	7.9	44.4	47.8
	여자	(504)	51.8	2.8	49.0	48.2
지역	서울	(199)	58.3	5.5	52.8	41.7
	인천/경기	(296)	51.7	4.7	47.0	48.3
	대전/충청	(103)	54.4	7.8	46.6	45.6
	광주/전라	(102)	50.0	3.9	46.1	50.0
	부산/울산/경남	(158)	49.4	6.3	43.0	50.6
	대구/경북	(100)	39.0	2.0	37.0	61.0
	강원/제주	(42)	64.3	9.5	54.8	35.7
직업	자영업	(134)	56.7	7.5	49.3	43.3
	판매/영업/서비스직	(71)	46.5	2.8	43.7	53.5
	생산/기능/노무직	(49)	42.9	2.0	40.8	57.1
	사무/관리/전문직	(409)	55.7	7.6	48.2	44.3
	주부	(179)	52.5	1.7	50.8	47.5
	학생	(44)	22.7	0.0	22.7	77.3
	기타/무직	(105)	47.6	4.8	42.9	52.4
	무응답	(9)	88.9	11.1	77.8	11.1
	중졸 이하	(122)	41.0	1.6	39.3	59.0
학력	고졸	(248)	44.4	3.2	41.1	55.6
	대졸	(500)	55.0	5.2	49.8	45.0
	대학원졸 이상	(109)	68.8	14.7	54.1	31.2
	무응답	(21)	47.6	4.8	42.9	52.4

2) 언론보도를 주로 접하는 매체

Q 귀하께서 언론보도를 주로 접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언론보도는 ‘방송’(47.8%)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포털’(20.2%), ‘인터넷신문’(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언론보도를 주로 접하는 매체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방송’을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81.0%), ‘생산/기능/노무직’(63.3%), ‘기타/무직’(61.9%), ‘판매/영업/서비스직’(5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방송	포털	인터넷신문	신문	페이스북 등 SNS	무응답
전체		(1000)	47.8	20.2	18.8	8.3	4.5	0.4
학력	중졸 이하	(122)	88.5	0.0	0.8	8.2	0.8	1.6
	고졸	(248)	62.9	12.5	11.3	9.7	3.2	0.4
	대졸	(500)	34.4	27.8	24.8	6.4	6.4	0.2
	대학원졸 이상	(109)	28.4	25.7	30.3	11.9	3.7	0.0
	무응답	(21)	52.4	19.0	9.5	19.0	0.0	0.0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46.0	21.0	18.8	11.0	2.9	0.4
	비인지	(480)	49.8	19.4	18.8	5.4	6.3	0.4

(명, %)		사례수	방송	포털	인터넷신문	신문	페이스북 등 SNS	무응답
전체		(1000)	47.8	20.2	18.8	8.3	4.5	0.4
성별	남자	(496)	39.3	23.2	22.6	9.7	4.6	0.6
	여자	(504)	56.2	17.3	15.1	6.9	4.4	0.2
연령	20대	(162)	16.7	34.0	32.7	3.7	13.0	0.0
	30대	(184)	25.5	36.4	30.4	1.6	6.0	0.0
	40대	(210)	43.8	23.8	22.4	6.2	2.9	1.0
	50대	(204)	61.8	11.8	11.3	12.3	2.9	0.0
	60대 이상	(240)	77.5	2.5	3.8	15.0	0.4	0.8
지역	서울	(199)	39.2	28.1	20.1	8.0	4.0	0.5
	인천/경기	(296)	42.2	22.0	20.3	9.5	5.4	0.7
	대전/충청	(103)	53.4	11.7	21.4	6.8	6.8	0.0
	광주/전라	(102)	62.7	11.8	16.7	4.9	3.9	0.0
	부산/울산/경남	(158)	50.0	19.6	17.1	10.1	3.2	0.0
	대구/경북	(100)	54.0	17.0	17.0	9.0	2.0	1.0
	강원/제주	(42)	54.8	21.4	11.9	4.8	7.1	0.0
	무응답	(9)	66.7	11.1	0.0	22.2	0.0	0.0
직업	자영업	(134)	53.0	20.1	14.2	8.2	4.5	0.0
	판매/영업/서비스직	(71)	54.9	15.5	15.5	5.6	8.5	0.0
	생산/기능/노무직	(49)	63.3	12.2	14.3	6.1	4.1	0.0
	사무/관리/전문직	(409)	27.9	30.1	29.3	7.3	4.9	0.5
	주부	(179)	81.0	5.6	5.0	6.7	1.7	0.0
	학생	(44)	15.9	31.8	36.4	2.3	13.6	0.0
	기타/무직	(105)	61.9	9.5	5.7	19.0	1.9	1.9
	무응답	(9)	66.7	11.1	0.0	22.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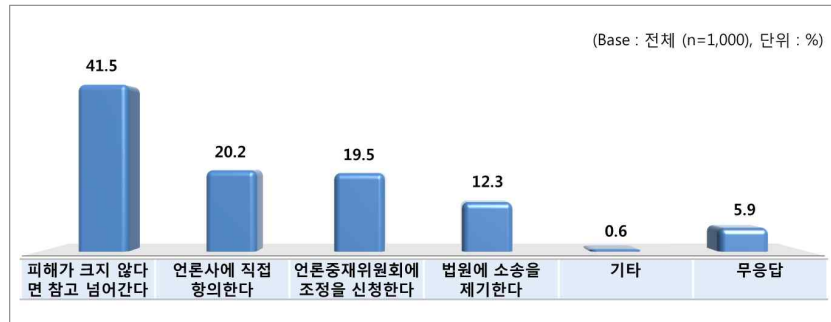
3)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 대응법

Q

귀하나 귀하 가족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4명(41.5%)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는 소극적 응답을 보임.
- 반면, 적극적 대응으로는 ‘언론사에 직접 항의한다’(20.2%),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19.5%),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 대응법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는 비율은 ‘60대 이상’(52.5%), ‘고졸’(49.6%), ‘주부’(51.4%), ‘기타/무직’(4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	언론사에 직접 항의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41.5	20.2	19.5	12.3	0.6	5.9
성별	남자	(496)	40.3	20.8	17.9	14.7	0.8	5.4
	여자	(504)	42.7	19.6	21.0	9.9	0.4	6.3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40.2	21.3	25.0	9.6	0.4	3.5
	비인지	(480)	42.9	19.0	13.5	15.2	0.8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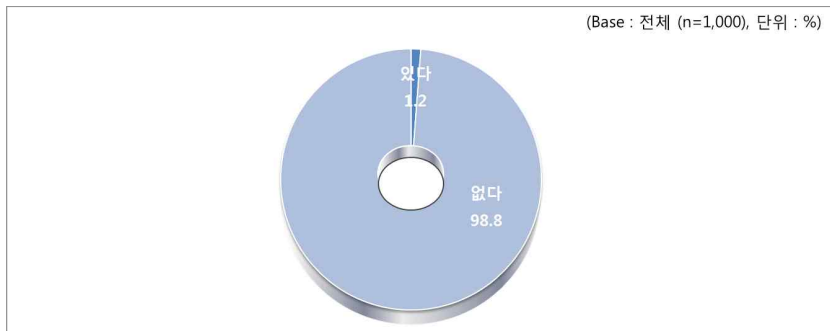
(명, %)		사례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	언론사에 직접 항의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41.5	20.2	19.5	12.3	0.6	5.9
연령	20대	(162)	38.9	23.5	13.6	18.5	1.2	4.3
	30대	(184)	33.7	26.1	15.8	19.0	1.1	4.3
	40대	(210)	34.8	21.0	24.8	13.8	0.0	5.7
	50대	(204)	44.6	18.6	22.5	7.4	0.5	6.4
	60대 이상	(240)	52.5	14.2	19.2	5.8	0.4	7.9
지역	서울	(199)	40.7	20.1	24.6	11.6	0.5	2.5
	인천/경기	(296)	41.6	19.9	15.9	16.2	0.3	6.1
	대전/충청	(103)	44.7	16.5	23.3	9.7	0.0	5.8
	광주/전라	(102)	47.1	16.7	15.7	10.8	0.0	9.8
	부산/울산/경남	(158)	39.2	24.7	17.7	10.8	0.6	7.0
	대구/경북	(100)	45.0	19.0	18.0	9.0	2.0	7.0
학력	강원/제주	(42)	23.8	26.2	31.0	11.9	2.4	4.8
	중졸 이하	(122)	47.5	18.0	11.5	9.8	0.0	13.1
	고졸	(248)	49.6	13.3	18.1	9.7	0.8	8.5
	대졸	(500)	38.8	22.6	20.4	14.0	0.8	3.4
	대학원졸 이상	(109)	25.7	28.4	30.3	12.8	0.0	2.8
직업	무응답	(21)	57.1	14.3	4.8	14.3	0.0	9.5
	자영업	(134)	38.8	20.9	20.9	11.9	0.0	7.5
	판매/영업/서비스직	(71)	39.4	12.7	19.7	19.7	0.0	8.5
	생산/기능/노무직	(49)	46.9	16.3	10.2	14.3	2.0	10.2
	사무/관리/전문직	(409)	35.7	24.7	23.0	12.2	0.7	3.7
	주부	(179)	51.4	13.4	19.6	7.3	0.6	7.8
	학생	(44)	40.9	25.0	4.5	25.0	0.0	4.5
	기타/무직	(105)	48.6	17.1	16.2	10.5	1.0	6.7
	무응답	(9)	55.6	33.3	0.0	11.1	0.0	0.0

4) 인터넷 기사 및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Q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기사의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였음.

【그림 4】 인터넷 기사 및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기사 및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1.2	98.8
학력	중졸 이하	(122)	0.0	100.0
	고졸	(248)	0.8	99.2
	대졸	(500)	0.8	99.2
	대학원졸 이상	(109)	3.7	96.3
	무응답	(21)	9.5	90.5
위원회 인지 여부	인지	(520)	1.9	98.1
	비인지	(480)	0.4	99.6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1.2	98.8
성별	남자	(496)	1.6	98.4
	여자	(504)	0.8	99.2
연령	20대	(162)	1.9	98.1
	30대	(184)	1.1	98.9
	40대	(210)	1.0	99.0
	50대	(204)	1.0	99.0
	60대 이상	(240)	1.3	98.8
지역	서울	(199)	1.5	98.5
	인천/경기	(296)	0.7	99.3
	대전/충청	(103)	1.9	98.1
	광주/전라	(102)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8)	1.9	98.1
	대구/경북	(100)	1.0	99.0
	강원/제주	(42)	2.4	97.6
직업	자영업	(134)	1.5	98.5
	판매/영업/서비스직	(71)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9)	2.0	98.0
	사무/관리/전문직	(409)	0.5	99.5
	주부	(179)	1.1	98.9
	학생	(44)	0.0	100.0
	기타/무직	(105)	3.8	96.2
	무응답	(9)	11.1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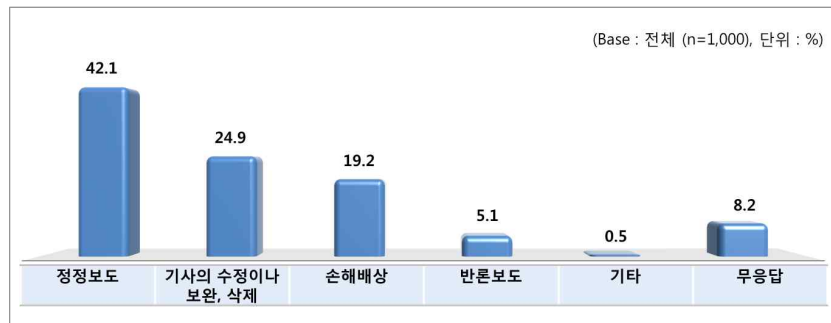
5)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방법

Q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42.1%)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 삭제’(24.9%), ‘손해배상’(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방법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라는 응답은 ‘학생’(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정정보도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 삭제	손해배상	반론보도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42.1	24.9	19.2	5.1	0.5	8.2
성별	남자	(496)	40.1	22.2	25.0	5.0	0.8	6.9
	여자	(504)	44.0	27.6	13.5	5.2	0.2	9.5
연령	20대	(162)	40.7	25.9	19.8	8.0	0.0	5.6
	30대	(184)	38.6	26.1	25.0	4.9	1.1	4.3
	40대	(210)	43.3	28.1	22.4	2.9	0.0	3.3
	50대	(204)	45.6	26.0	15.2	4.9	1.0	7.4
	60대 이상	(240)	41.7	19.6	15.0	5.4	0.4	17.9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45.6	24.2	20.4	4.8	0.2	4.8
	비인지	(480)	38.3	25.6	17.9	5.4	0.8	11.9

(명, %)		사례수	정정보도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 삭제	손해배상	반론보도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42.1	24.9	19.2	5.1	0.5	8.2
지역	서울	(199)	42.2	22.1	22.6	6.0	1.0	6.0
	인천/경기	(296)	43.2	26.0	18.2	3.7	1.0	7.8
	대전/충청	(103)	43.7	24.3	20.4	4.9	0.0	6.8
	광주/전라	(102)	38.2	24.5	20.6	6.9	0.0	9.8
	부산/울산/경남	(158)	42.4	26.6	17.7	3.2	0.0	10.1
	대구/경북	(100)	42.0	26.0	13.0	8.0	0.0	11.0
	강원/제주	(42)	38.1	23.8	23.8	7.1	0.0	7.1
학력	중졸 이하	(122)	36.1	19.7	14.8	3.3	0.0	26.2
	고졸	(248)	46.8	26.2	12.5	5.2	0.4	8.9
	대졸	(500)	40.2	25.8	22.8	6.0	0.8	4.4
	대학원졸 이상	(109)	46.8	23.9	23.9	2.8	0.0	2.8
	무응답	(21)	42.9	23.8	14.3	4.8	0.0	14.3
직업	자영업	(134)	38.1	23.1	25.4	3.7	0.7	9.0
	판매/영업/서비스직	(71)	39.4	28.2	23.9	2.8	0.0	5.6
	생산/기능/노무직	(49)	40.8	22.4	20.4	4.1	0.0	12.2
	사무/관리/전문직	(409)	43.5	27.4	20.5	5.4	0.7	2.4
	주부	(179)	40.2	27.9	10.1	6.1	0.6	15.1
	학생	(44)	50.0	9.1	22.7	9.1	0.0	9.1
	기타/무직	(105)	41.9	20.0	15.2	4.8	0.0	18.1
	무응답	(9)	66.7	0.0	33.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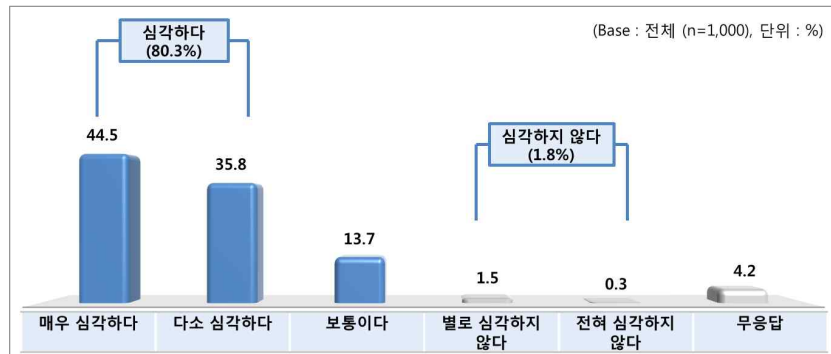
2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1)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귀하께서는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 (80.3%)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그림 6】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대’ (88.2%), ‘강원/제주’(9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44.5	35.8	13.7	1.5	0.3	4.2	80.3	1.8
성별	남자	(496)	40.1	35.7	17.5	1.6	0.2	4.8	75.8	1.8
	여자	(504)	48.8	35.9	9.9	1.4	0.4	3.6	84.7	1.8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47.7	38.1	9.6	1.3	0.2	3.1	85.8	1.5
	비인지	(480)	41.0	33.3	18.1	1.7	0.4	5.4	74.4	2.1

(명, %)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44.5	35.8	13.7	1.5	0.3	4.2	80.3	1.8
연령	20대	(162)	25.3	47.5	25.3	1.2	0.0	0.6	72.8	1.2
	30대	(184)	40.8	39.1	14.1	2.2	0.5	3.3	79.9	2.7
	40대	(210)	46.2	32.9	14.3	1.0	1.0	4.8	79.0	1.9
	50대	(204)	45.6	42.6	8.8	1.0	0.0	2.0	88.2	1.0
	60대 이상	(240)	57.9	22.1	9.2	2.1	0.0	8.8	80.0	2.1
지역	서울	(199)	47.7	36.7	10.1	2.5	1.0	2.0	84.4	3.5
	인천/경기	(296)	44.9	32.8	15.9	1.0	0.3	5.1	77.7	1.4
	대전/충청	(103)	44.7	38.8	5.8	3.9	0.0	6.8	83.5	3.9
	광주/전라	(102)	42.2	37.3	13.7	1.0	0.0	5.9	79.4	1.0
	부산/울산/경남	(158)	40.5	38.6	17.7	0.6	0.0	2.5	79.1	0.6
	대구/경북	(100)	43.0	32.0	18.0	1.0	0.0	6.0	75.0	1.0
	강원/제주	(42)	50.0	40.5	9.5	0.0	0.0	0.0	90.5	0.0
학력	중졸 이하	(122)	56.6	23.0	8.2	0.0	0.0	12.3	79.5	0.0
	고졸	(248)	46.0	31.0	15.7	3.2	0.4	3.6	77.0	3.6
	대졸	(500)	40.6	41.6	13.8	0.8	0.4	2.8	82.2	1.2
	대학원졸 이상	(109)	45.0	37.6	12.8	2.8	0.0	1.8	82.6	2.8
	무응답	(21)	47.6	19.0	23.8	0.0	0.0	9.5	66.7	0.0
직업	자영업	(134)	47.0	33.6	9.7	1.5	0.7	7.5	80.6	2.2
	판매/영업/서비스직	(71)	47.9	38.0	12.7	0.0	0.0	1.4	85.9	0.0
	생산/기능/노무직	(49)	34.7	32.7	22.4	4.1	0.0	6.1	67.3	4.1
	사무/관리/전문직	(409)	41.1	39.6	16.4	1.0	0.2	1.7	80.7	1.2
	주부	(179)	58.1	25.7	7.8	1.7	0.6	6.1	83.8	2.2
	학생	(44)	15.9	61.4	20.5	2.3	0.0	0.0	77.3	2.3
	기타/무직	(105)	45.7	29.5	13.3	2.9	0.0	8.6	75.2	2.9
	무응답	(9)	44.4	44.4	0.0	0.0	0.0	11.1	88.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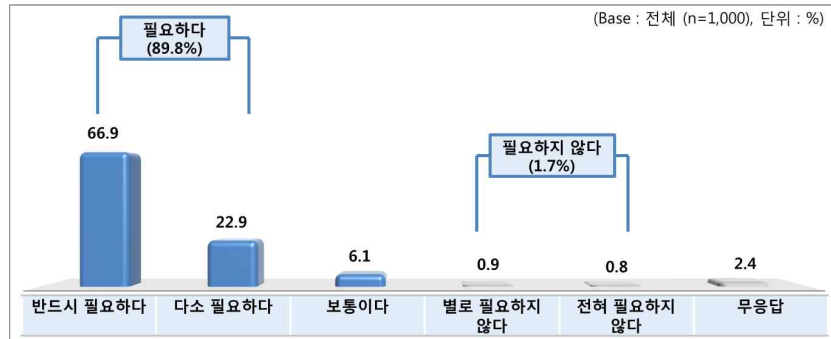
2) 침해배제청구권 필요성

Q

귀하께서는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상의 기사를 수정하거나 보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89.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함.

【그림 7】 침해배제 청구권 필요성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침해배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에 공감할수록 높게 나타남.

(명, %)		사례 수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6.9	22.9	6.1	0.9	0.8	2.4	89.8	1.7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	심각함	(803)	72.0	21.8	4.1	0.5	0.4	1.2	93.8	0.9
	보통	(137)	46.7	29.9	17.5	2.2	0.7	2.9	76.6	2.9
	심각하지 않음	(18)	44.4	16.7	11.1	5.6	11.1	11.1	61.1	16.7
	무응답	(42)	45.2	23.8	4.8	2.4	4.8	19.0	69.0	7.1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72.5	21.0	3.8	1.0	0.8	1.0	93.5	1.7
	비인지	(480)	60.8	25.0	8.5	0.8	0.8	4.0	85.8	1.7

(명, %)		사례 수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6.9	22.9	6.1	0.9	0.8	2.4	89.8	1.7
성별	남자	(496)	64.9	22.4	8.7	1.6	1.2	1.2	87.3	2.8
	여자	(504)	68.8	23.4	3.6	0.2	0.4	3.6	92.3	0.6
연령	20대	(162)	54.3	30.2	12.3	1.9	0.6	0.6	84.6	2.5
	30대	(184)	59.8	28.8	7.6	0.5	1.6	1.6	88.6	2.2
	40대	(210)	68.1	24.3	3.8	1.9	1.0	1.0	92.4	2.9
	50대	(204)	72.5	20.1	4.4	0.5	0.0	2.5	92.6	0.5
	60대 이상	(240)	75.0	14.6	4.2	0.0	0.8	5.4	89.6	0.8
지역	서울	(199)	71.4	21.6	5.0	0.0	0.5	1.5	93.0	0.5
	인천/경기	(296)	64.9	24.0	7.1	1.4	0.3	2.4	88.9	1.7
	대전/충청	(103)	75.7	17.5	2.9	1.0	1.9	1.0	93.2	2.9
	광주/전라	(102)	67.6	21.6	4.9	0.0	2.9	2.9	89.2	2.9
	부산/울산/경남	(158)	62.7	25.3	6.3	1.3	0.0	4.4	88.0	1.3
	대구/경북	(100)	62.0	25.0	8.0	1.0	1.0	3.0	87.0	2.0
	강원/제주	(42)	64.3	23.8	9.5	2.4	0.0	0.0	88.1	2.4
학력	중졸 이하	(122)	69.7	12.3	7.4	0.0	0.0	10.7	82.0	0.0
	고졸	(248)	64.1	25.8	6.5	0.4	0.8	2.4	89.9	1.2
	대졸	(500)	65.6	26.2	5.6	1.2	0.6	0.8	91.8	1.8
	대학원졸 이상	(109)	77.1	12.8	5.5	1.8	1.8	0.9	89.9	3.7
	무응답	(21)	61.9	23.8	9.5	0.0	4.8	0.0	85.7	4.8
직업	자영업	(134)	73.9	18.7	2.2	1.5	2.2	1.5	92.5	3.7
	판매/영업/서비스직	(71)	74.6	21.1	4.2	0.0	0.0	0.0	95.8	0.0
	생산/기능/노무직	(49)	63.3	18.4	14.3	0.0	2.0	2.0	81.6	2.0
	사무/관리/전문직	(409)	65.0	25.9	7.1	1.2	0.2	0.5	91.0	1.5
	주부	(179)	68.2	20.7	3.9	0.0	0.6	6.7	88.8	0.6
	학생	(44)	52.3	31.8	11.4	4.5	0.0	0.0	84.1	4.5
	기타/무직	(105)	65.7	21.0	5.7	0.0	1.0	6.7	86.7	1.0
	무응답	(9)	66.7	11.1	11.1	0.0	11.1	0.0	77.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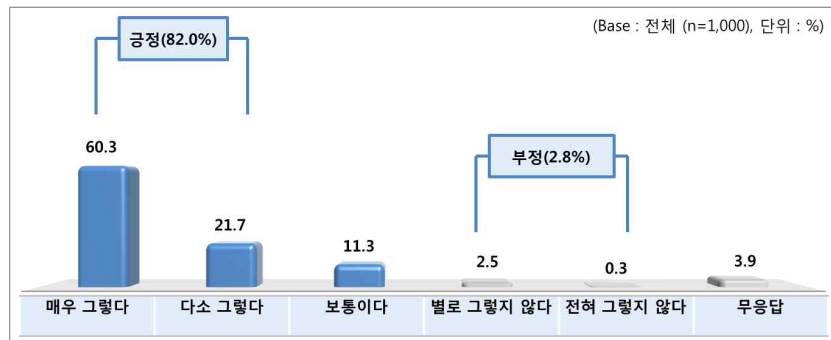
3) 침해배제청구권 중재위 조치 필요성

Q

귀하께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넷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론사를 상대로 침해배제청구권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82.0%)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2.8%에 불과함.

【그림 8】 침해배제 청구권 중재위 조치 필요성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침해배제청구권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에 공감할수록 높게 나타남.

(명, %)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0.3	21.7	11.3	2.5	0.3	3.9	82.0	2.8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	심각함	(803)	66.5	19.3	9.0	2.2	0.2	2.7	85.8	2.5
	보통	(137)	32.8	35.0	24.1	3.6	0.7	3.6	67.9	4.4
	심각하지 않음	(18)	38.9	33.3	11.1	5.6	0.0	11.1	72.2	5.6
	무응답	(42)	40.5	19.0	14.3	2.4	0.0	23.8	59.5	2.4
위원회 인지 여부	인지	(520)	67.1	19.0	7.9	2.7	0.2	3.1	86.2	2.9
	비인지	(480)	52.9	24.6	15.0	2.3	0.4	4.8	77.5	2.7

(명, %)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0.3	21.7	11.3	2.5	0.3	3.9	82.0	2.8
성별	남자	(496)	57.5	22.4	12.7	3.8	0.6	3.0	79.8	4.4
	여자	(504)	63.1	21.0	9.9	1.2	0.0	4.8	84.1	1.2
연령	20대	(162)	38.9	33.3	24.7	2.5	0.0	0.6	72.2	2.5
	30대	(184)	56.0	27.2	10.9	2.7	0.5	2.7	83.2	3.3
	40대	(210)	67.1	18.1	7.6	2.9	0.5	3.8	85.2	3.3
	50대	(204)	67.2	16.7	10.3	2.9	0.0	2.9	83.8	2.9
	60대 이상	(240)	66.3	17.1	6.7	1.7	0.4	7.9	83.3	2.1
지역	서울	(199)	61.3	20.6	11.6	2.0	0.0	4.5	81.9	2.0
	인천/경기	(296)	61.8	20.6	9.5	4.1	0.3	3.7	82.4	4.4
	대전/충청	(103)	69.9	15.5	9.7	3.9	0.0	1.0	85.4	3.9
	광주/전라	(102)	53.9	20.6	12.7	2.0	1.0	9.8	74.5	2.9
	부산/울산/경남	(158)	57.0	28.5	9.5	1.3	0.6	3.2	85.4	1.9
	대구/경북	(100)	55.0	25.0	17.0	1.0	0.0	2.0	80.0	1.0
	강원/제주	(42)	61.9	19.0	16.7	0.0	0.0	2.4	81.0	0.0
학력	중졸 이하	(122)	59.0	21.3	9.0	0.8	0.0	9.8	80.3	0.8
	고졸	(248)	62.1	21.4	10.1	1.2	0.4	4.8	83.5	1.6
	대졸	(500)	60.4	21.8	12.0	3.4	0.4	2.0	82.2	3.8
	대학원졸 이상	(109)	63.3	21.1	9.2	3.7	0.0	2.8	84.4	3.7
	무응답	(21)	28.6	28.6	33.3	0.0	0.0	9.5	57.1	0.0
직업	자영업	(134)	68.7	13.4	9.0	3.0	0.7	5.2	82.1	3.7
	판매/영업/서비스직	(71)	70.4	16.9	11.3	1.4	0.0	0.0	87.3	1.4
	생산/기능/노무직	(49)	46.9	30.6	8.2	4.1	2.0	8.2	77.6	6.1
	사무/관리/전문직	(409)	59.4	25.2	11.2	2.2	0.2	1.7	84.6	2.4
	주부	(179)	65.9	15.6	10.1	2.2	0.0	6.1	81.6	2.2
	학생	(44)	36.4	31.8	27.3	2.3	0.0	2.3	68.2	2.3
	기타/무직	(105)	54.3	23.8	9.5	3.8	0.0	8.6	78.1	3.8
	무응답	(9)	44.4	22.2	33.3	0.0	0.0	0.0	6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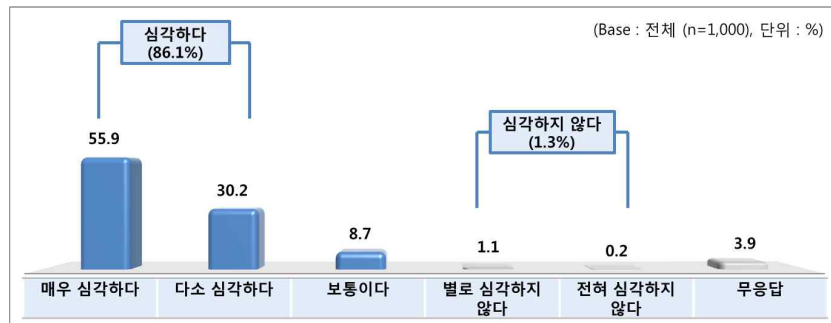
3 복제기사 관련

1)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Q 귀하께서는 잘못된 보도가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6.1%로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그림 9】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명, %)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55.9	30.2	8.7	1.1	0.2	3.9	86.1	1.3
성별	남자	(496)	52.2	29.6	11.1	2.0	0.4	4.6	81.9	2.4
	여자	(504)	59.5	30.8	6.3	0.2	0.0	3.2	90.3	0.2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59.2	31.0	6.0	1.3	0.2	2.3	90.2	1.5
	비인지	(480)	52.3	29.4	11.7	0.8	0.2	5.6	81.7	1.0

(명, %)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55.9	30.2	8.7	1.1	0.2	3.9	86.1	1.3
연령	20대	(162)	48.8	34.6	13.6	0.6	0.0	2.5	83.3	0.6
	30대	(184)	51.1	35.9	9.8	0.0	0.5	2.7	87.0	0.5
	40대	(210)	56.7	29.5	8.1	2.4	0.0	3.3	86.2	2.4
	50대	(204)	57.8	28.9	8.8	0.0	0.5	3.9	86.8	0.5
	60대 이상	(240)	62.1	24.6	5.0	2.1	0.0	6.3	86.7	2.1
지역	서울	(199)	57.8	33.2	6.0	0.5	0.5	2.0	91.0	1.0
	인천/경기	(296)	58.4	28.0	7.4	0.3	0.3	5.4	86.5	0.7
	대전/충청	(103)	56.3	30.1	8.7	1.9	0.0	2.9	86.4	1.9
	광주/전라	(102)	51.0	34.3	10.8	1.0	0.0	2.9	85.3	1.0
	부산/울산/경남	(158)	57.6	24.7	11.4	1.9	0.0	4.4	82.3	1.9
	대구/경북	(100)	49.0	32.0	12.0	2.0	0.0	5.0	81.0	2.0
학력	강원/제주	(42)	50.0	38.1	7.1	2.4	0.0	2.4	88.1	2.4
	중졸 이하	(122)	62.3	18.0	8.2	1.6	0.0	9.8	80.3	1.6
	고졸	(248)	54.4	31.9	8.9	0.8	0.0	4.0	86.3	0.8
	대졸	(500)	55.4	32.4	8.8	0.6	0.0	2.8	87.8	0.6
	대학원졸 이상	(109)	56.9	31.2	7.3	1.8	0.9	1.8	88.1	2.8
직업	무응답	(21)	42.9	23.8	14.3	9.5	4.8	4.8	66.7	14.3
	자영업	(134)	54.5	29.1	9.0	0.7	0.0	6.7	83.6	0.7
	판매/영업/서비스직	(71)	67.6	19.7	9.9	0.0	0.0	2.8	87.3	0.0
	생산/기능/노무직	(49)	49.0	30.6	14.3	2.0	0.0	4.1	79.6	2.0
	사무/관리/전문직	(409)	54.0	33.7	8.1	1.0	0.5	2.7	87.8	1.5
	주부	(179)	63.7	24.6	6.1	0.0	0.0	5.6	88.3	0.0
	학생	(44)	47.7	38.6	13.6	0.0	0.0	0.0	86.4	0.0
	기타/무직	(105)	49.5	32.4	9.5	3.8	0.0	4.8	81.9	3.8
	무응답	(9)	66.7	11.1	11.1	11.1	0.0	0.0	77.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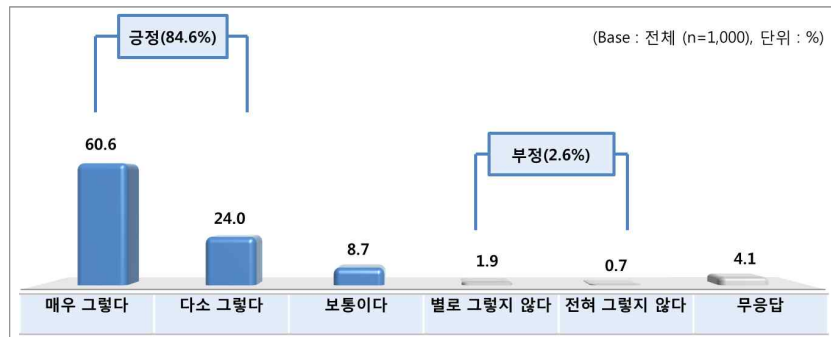
2) 복제기사에 대한 중재위 조치 필요성

Q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를 구제받은 잘못된 보도가 블로그나 카페에 전파된 경우, 그렇게 전파된 기사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제기사에 대한 일괄적인 피해구제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4.6%의 응답자가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2.6%에 불과함.

【그림 10】 복제기사에 대한 중재위 조치 필요성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복제기사에 대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에 공감할수록, ‘대전/충청’(9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0.6	24.0	8.7	1.9	0.7	4.1	84.6	2.6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	심각함	(861)	65.3	23.6	6.3	1.3	0.7	2.9	88.9	2.0
	보통	(87)	24.1	33.3	33.3	4.6	1.1	3.4	57.5	5.7
	심각하지 않음	(13)	30.8	7.7	7.7	23.1	0.0	30.8	38.5	23.1
	무응답	(39)	48.7	17.9	7.7	2.6	0.0	23.1	66.7	2.6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64.8	22.7	6.9	1.7	0.6	3.3	87.5	2.3
	비인지	(480)	56.0	25.4	10.6	2.1	0.8	5.0	81.5	2.9

	(명, %)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0.6	24.0	8.7	1.9	0.7	4.1	84.6	2.6
성별	남자	(496)	58.9	22.8	10.5	2.8	1.2	3.8	81.7	4.0
	여자	(504)	62.3	25.2	6.9	1.0	0.2	4.4	87.5	1.2
연령	20대	(162)	40.7	36.4	17.3	2.5	1.2	1.9	77.2	3.7
	30대	(184)	57.6	28.3	8.2	2.2	1.1	2.7	85.9	3.3
	40대	(210)	65.2	19.0	9.0	1.4	1.0	4.3	84.3	2.4
	50대	(204)	67.2	22.5	4.4	2.0	0.0	3.9	89.7	2.0
	60대 이상	(240)	66.7	17.9	6.7	1.7	0.4	6.7	84.6	2.1
지역	서울	(199)	61.8	21.6	8.5	2.0	0.5	5.5	83.4	2.5
	인천/경기	(296)	60.5	25.7	7.8	1.4	0.7	4.1	86.1	2.0
	대전/충청	(103)	68.0	23.3	7.8	0.0	0.0	1.0	91.3	0.0
	광주/전라	(102)	62.7	18.6	8.8	3.9	1.0	4.9	81.4	4.9
	부산/울산/경남	(158)	58.9	22.8	10.1	1.9	1.9	4.4	81.6	3.8
	대구/경북	(100)	52.0	34.0	6.0	4.0	0.0	4.0	86.0	4.0
	강원/제주	(42)	59.5	19.0	19.0	0.0	0.0	2.4	78.6	0.0
학력	중졸 이하	(122)	66.4	15.6	7.4	0.8	0.8	9.0	82.0	1.6
	고졸	(248)	58.1	24.2	10.5	2.0	0.4	4.8	82.3	2.4
	대졸	(500)	59.4	27.0	8.4	2.0	1.0	2.2	86.4	3.0
	대학원졸 이상	(109)	68.8	17.4	9.2	0.9	0.0	3.7	86.2	0.9
	무응답	(21)	42.9	33.3	0.0	9.5	0.0	14.3	76.2	9.5
직업	자영업	(134)	65.7	21.6	5.2	1.5	1.5	4.5	87.3	3.0
	판매/영업/서비스직	(71)	62.0	22.5	4.2	2.8	0.0	8.5	84.5	2.8
	생산/기능/노무직	(49)	49.0	28.6	12.2	4.1	0.0	6.1	77.6	4.1
	사무/관리/전문직	(409)	61.1	25.2	9.3	1.7	0.5	2.2	86.3	2.2
	주부	(179)	62.0	21.2	7.3	2.8	0.6	6.1	83.2	3.4
	학생	(44)	38.6	38.6	18.2	0.0	2.3	2.3	77.3	2.3
	기타/무직	(105)	61.9	21.9	9.5	1.0	1.0	4.8	83.8	1.9
	무응답	(9)	77.8	0.0	22.2	0.0	0.0	0.0	77.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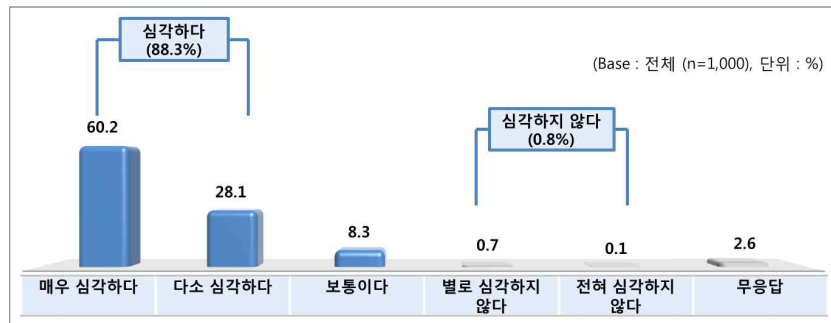
4 기사댓글 피해 관련

1)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Q 귀하께서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8.3%로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함.

【그림 11】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명, %)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0.2	28.1	8.3	0.7	0.1	2.6	88.3	0.8
성별	남자	(496)	53.8	29.8	12.1	1.2	0.2	2.8	83.7	1.4
	여자	(504)	66.5	26.4	4.6	0.2	0.0	2.4	92.9	0.2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62.3	29.4	5.8	1.0	0.2	1.3	91.7	1.2
	비인지	(480)	57.9	26.7	11.0	0.4	0.0	4.0	84.6	0.4

(명, %)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60.2	28.1	8.3	0.7	0.1	2.6	88.3	0.8
연령	20대	(162)	50.6	39.5	9.3	0.0	0.0	0.6	90.1	0.0
	30대	(184)	59.8	30.4	8.2	0.5	0.0	1.1	90.2	0.5
	40대	(210)	59.0	26.2	9.5	1.9	0.0	3.3	85.2	1.9
	50대	(204)	61.8	27.5	8.3	1.0	0.0	1.5	89.2	1.0
	60대 이상	(240)	66.7	20.8	6.7	0.0	0.4	5.4	87.5	0.4
지역	서울	(199)	64.3	26.1	7.0	0.5	0.5	1.5	90.5	1.0
	인천/경기	(296)	59.1	28.7	8.1	0.3	0.0	3.7	87.8	0.3
	대전/충청	(103)	61.2	28.2	7.8	1.9	0.0	1.0	89.3	1.9
	광주/전라	(102)	59.8	29.4	9.8	0.0	0.0	1.0	89.2	0.0
	부산/울산/경남	(158)	60.1	27.8	8.2	0.6	0.0	3.2	88.0	0.6
	대구/경북	(100)	57.0	28.0	11.0	1.0	0.0	3.0	85.0	1.0
	강원/제주	(42)	54.8	31.0	7.1	2.4	0.0	4.8	85.7	2.4
학력	중졸 이하	(122)	69.7	18.9	7.4	0.0	0.0	4.1	88.5	0.0
	고졸	(248)	55.6	29.4	10.1	0.8	0.0	4.0	85.1	0.8
	대졸	(500)	59.6	30.8	7.2	0.6	0.0	1.8	90.4	0.6
	대학원졸 이상	(109)	64.2	23.9	8.3	0.9	0.9	1.8	88.1	1.8
	무응답	(21)	52.4	23.8	19.0	4.8	0.0	0.0	76.2	4.8
직업	자영업	(134)	62.7	23.1	9.7	0.7	0.0	3.7	85.8	0.7
	판매/영업/서비스직	(71)	70.4	22.5	4.2	1.4	0.0	1.4	93.0	1.4
	생산/기능/노무직	(49)	46.9	36.7	8.2	2.0	0.0	6.1	83.7	2.0
	사무/관리/전문직	(409)	57.9	31.1	9.0	1.0	0.0	1.0	89.0	1.0
	주부	(179)	66.5	24.0	6.1	0.0	0.0	3.4	90.5	0.0
	학생	(44)	47.7	43.2	6.8	0.0	0.0	2.3	90.9	0.0
	기타/무직	(105)	60.0	23.8	10.5	0.0	1.0	4.8	83.8	1.0
	무응답	(9)	55.6	22.2	11.1	0.0	0.0	11.1	77.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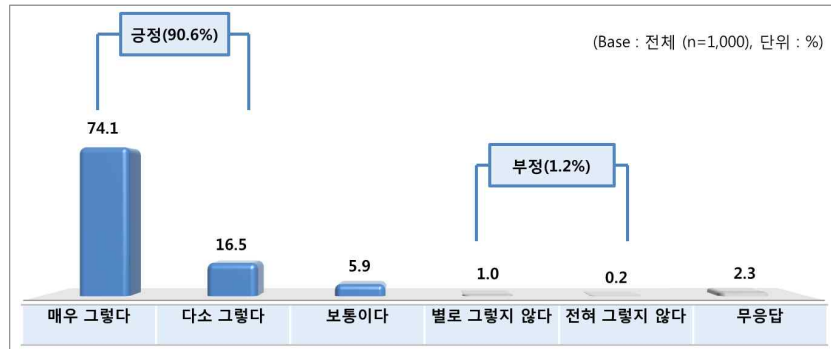
2) 기사댓글 피해구제 중재위 조치 필요성

Q

귀하께서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관련 기사댓글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댓글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90.6%)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부정적’ 의견은 1.2%에 불과함.

【그림 12】 기사댓글 피해구제 중재위 조치 필요성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 심각성에 공감할수록 높게 나타남.

(명, %)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74.1	16.5	5.9	1.0	0.2	2.3	90.6	1.2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 심각성	심각함	(883)	78.7	15.3	4.0	0.7	0.0	1.4	94.0	0.7
	보통	(83)	37.3	31.3	26.5	0.0	1.2	3.6	68.7	1.2
	심각하지 않음	(8)	37.5	0.0	12.5	50.0	0.0	0.0	37.5	50.0
	무응답	(26)	46.2	15.4	3.8	0.0	3.8	30.8	61.5	3.8
위원회 인지도부	인지	(520)	78.1	14.2	4.2	1.2	0.0	2.3	92.3	1.2
	비인지	(480)	69.8	19.0	7.7	0.8	0.4	2.3	88.8	1.3

(명, %)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74.1	16.5	5.9	1.0	0.2	2.3	90.6	1.2
성별	남자	(496)	70.0	18.3	7.3	1.4	0.4	2.6	88.3	1.8
	여자	(504)	78.2	14.7	4.6	0.6	0.0	2.0	92.9	0.6
연령	20대	(162)	60.5	26.5	10.5	1.2	0.0	1.2	87.0	1.2
	30대	(184)	74.5	16.8	6.5	0.5	0.0	1.6	91.3	0.5
	40대	(210)	77.1	13.3	3.8	1.9	1.0	2.9	90.5	2.9
	50대	(204)	77.9	12.7	6.4	0.5	0.0	2.5	90.7	0.5
	60대 이상	(240)	77.1	15.4	3.8	0.8	0.0	2.9	92.5	0.8
지역	서울	(199)	76.9	13.6	7.0	0.5	0.5	1.5	90.5	1.0
	인천/경기	(296)	73.6	14.2	5.4	2.0	0.3	4.4	87.8	2.4
	대전/충청	(103)	76.7	16.5	5.8	1.0	0.0	0.0	93.2	1.0
	광주/전라	(102)	74.5	18.6	3.9	1.0	0.0	2.0	93.1	1.0
	부산/울산/경남	(158)	72.2	18.4	6.3	0.6	0.0	2.5	90.5	0.6
	대구/경북	(100)	66.0	26.0	8.0	0.0	0.0	0.0	92.0	0.0
	강원/제주	(42)	83.3	11.9	2.4	0.0	0.0	2.4	95.2	0.0
학력	중졸 이하	(122)	77.9	15.6	3.3	0.0	0.0	3.3	93.4	0.0
	고졸	(248)	74.2	13.3	8.5	2.0	0.0	2.0	87.5	2.0
	대졸	(500)	73.6	18.2	5.6	0.4	0.4	1.8	91.8	0.8
	대학원졸 이상	(109)	78.0	13.8	3.7	1.8	0.0	2.8	91.7	1.8
	무응답	(21)	42.9	33.3	9.5	4.8	0.0	9.5	76.2	4.8
직업	자영업	(134)	78.4	13.4	3.7	0.7	1.5	2.2	91.8	2.2
	판매/영업/서비스직	(71)	85.9	7.0	5.6	0.0	0.0	1.4	93.0	0.0
	생산/기능/노무직	(49)	65.3	22.4	8.2	2.0	0.0	2.0	87.8	2.0
	사무/관리/전문직	(409)	75.1	15.4	6.4	1.2	0.0	2.0	90.5	1.2
	주부	(179)	74.3	16.8	6.1	0.6	0.0	2.2	91.1	0.6
	학생	(44)	50.0	38.6	6.8	2.3	0.0	2.3	88.6	2.3
	기타/무직	(105)	72.4	18.1	4.8	1.0	0.0	3.8	90.5	1.0
	무응답	(9)	55.6	22.2	11.1	0.0	0.0	11.1	77.8	0.0

5 위원회 이용 의사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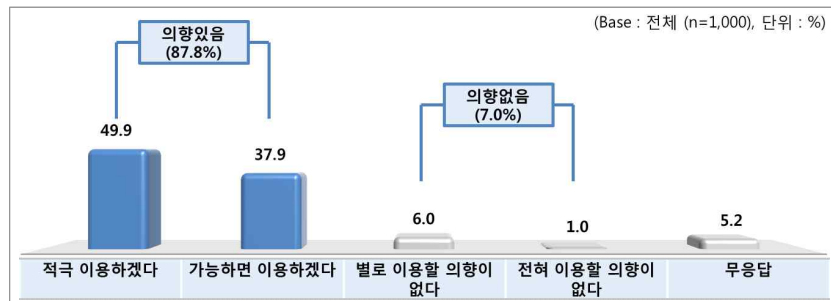
1)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

Q

잘못된 언론보도와 함께 원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에 전파되고, 기사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잘못된 언론보도와 함께 원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에 전파되고, 기사댓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7.8%의 응답자가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7.0%였음.

【그림 13】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견은 ‘강원/제주’(9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적극 이용하 겠다	가능하면 이용하 겠다	별로 이용할 의향이 없다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49.9	37.9	6.0	1.0	5.2	87.8	7.0
성별	남자	(496)	48.2	38.7	7.1	1.8	4.2	86.9	8.9
	여자	(504)	51.6	37.1	5.0	0.2	6.2	88.7	5.2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520)	55.4	36.5	3.7	1.2	3.3	91.9	4.8
	비인지	(480)	44.0	39.4	8.5	0.8	7.3	83.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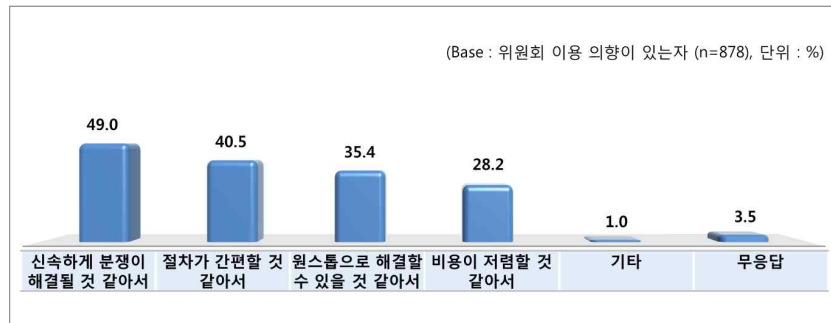
(명, %)		사례수	적극 이용하 겠다	가능하면 이용하 겠다	별로 이용할 의향이 없다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무응답	Top2	Bot2
전체		(1000)	49.9	37.9	6.0	1.0	5.2	87.8	7.0
연령	20대	(162)	28.4	59.3	10.5	0.6	1.2	87.7	11.1
	30대	(184)	51.6	39.1	6.5	0.5	2.2	90.8	7.1
	40대	(210)	62.9	26.2	5.2	1.0	4.8	89.0	6.2
	50대	(204)	52.0	38.2	4.9	2.0	2.9	90.2	6.9
	60대 이상	(240)	50.0	32.5	4.2	0.8	12.5	82.5	5.0
지역	서울	(199)	50.3	38.2	4.5	1.5	5.5	88.4	6.0
	인천/경기	(296)	50.7	36.8	7.1	1.4	4.1	87.5	8.4
	대전/충청	(103)	48.5	37.9	4.9	1.9	6.8	86.4	6.8
	광주/전라	(102)	45.1	43.1	5.9	0.0	5.9	88.2	5.9
	부산/울산/경남	(158)	48.7	36.1	5.7	0.6	8.9	84.8	6.3
	대구/경북	(100)	53.0	37.0	8.0	0.0	2.0	90.0	8.0
	강원/제주	(42)	54.8	40.5	4.8	0.0	0.0	95.2	4.8
학력	중졸 이하	(122)	45.1	32.0	7.4	0.0	15.6	77.0	7.4
	고졸	(248)	52.0	37.1	6.0	0.0	4.8	89.1	6.0
	대졸	(500)	48.6	42.0	5.0	1.2	3.2	90.6	6.2
	대학원졸 이상	(109)	59.6	30.3	7.3	2.8	0.0	89.9	10.1
	무응답	(21)	33.3	23.8	14.3	4.8	23.8	57.1	19.0
직업	자영업	(134)	53.0	35.8	3.0	3.0	5.2	88.8	6.0
	판매/영업/서비스직	(71)	63.4	29.6	4.2	1.4	1.4	93.0	5.6
	생산/기능/노무직	(49)	44.9	32.7	16.3	0.0	6.1	77.6	16.3
	사무/관리/전문직	(409)	53.1	37.2	6.6	1.0	2.2	90.2	7.6
	주부	(179)	49.2	35.8	4.5	0.0	10.6	84.9	4.5
	학생	(44)	22.7	68.2	6.8	0.0	2.3	90.9	6.8
	기타/무직	(105)	42.9	41.0	5.7	1.0	9.5	83.8	6.7
	무응답	(9)	11.1	55.6	11.1	0.0	22.2	66.7	11.1

2)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있는 이유(중복응답)

Q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 같아서’가 4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절차가 간편할 것 같아서’(40.5%)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14】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있는 이유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대전/충청’(57.3%),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기능/노무직’(60.5%), ‘판매/영업/서비스직’(5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 같아서	절차가 간편할 것 같아서	원스톱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기타	무응답
전체		(878)	49.0	40.5	35.4	28.2	1.0	3.5
성별	남자	(431)	48.3	39.7	33.6	29.5	0.7	4.2
	여자	(447)	49.7	41.4	37.1	27.1	1.3	2.9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478)	47.7	41.4	41.0	31.0	1.0	2.7
	비인지	(400)	50.5	39.5	28.8	25.0	1.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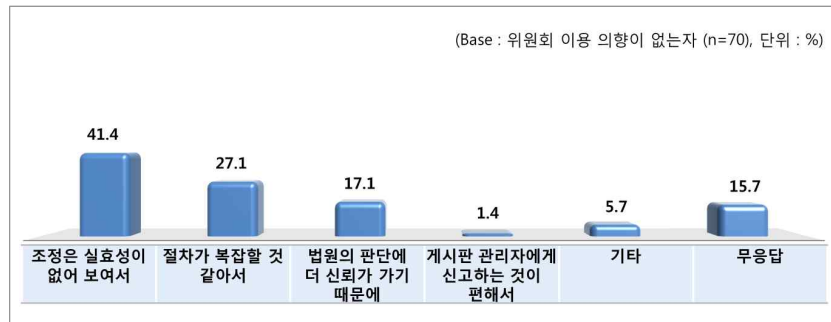
(명, %)		사례수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 같아서	절차가 간편할 것 같아서	원스톱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기타	무응답
전체		(878)	49.0	40.5	35.4	28.2	1.0	3.5
연령	20대	(142)	45.8	45.8	32.4	21.1	0.0	0.7
	30대	(167)	41.9	43.1	41.9	31.1	1.2	2.4
	40대	(187)	48.7	43.9	41.7	25.1	0.5	2.1
	50대	(184)	52.7	40.8	35.3	33.7	1.6	6.5
	60대 이상	(198)	54.0	31.3	26.3	28.8	1.5	5.1
지역	서울	(176)	42.6	35.2	35.2	35.8	2.3	3.4
	인천/경기	(259)	48.3	45.6	33.2	27.0	0.4	3.5
	대전/충청	(89)	57.3	37.1	37.1	31.5	1.1	0.0
	광주/전라	(90)	53.3	41.1	35.6	24.4	0.0	6.7
	부산/울산/경남	(134)	49.3	40.3	40.3	24.6	0.0	3.7
	대구/경북	(90)	52.2	35.6	34.4	26.7	3.3	4.4
	강원/제주	(40)	45.0	50.0	32.5	20.0	0.0	2.5
학력	중졸 이하	(94)	57.4	20.2	20.2	28.7	2.1	6.4
	고졸	(221)	50.2	44.8	25.8	30.3	0.0	4.5
	대졸	(453)	47.5	43.0	41.3	28.5	1.5	2.2
	대학원졸 이상	(98)	45.9	39.8	43.9	23.5	0.0	3.1
	무응답	(12)	41.7	33.3	41.7	16.7	0.0	16.7
직업	자영업	(119)	52.1	39.5	26.9	31.1	1.7	2.5
	판매/영업/서비스직	(66)	59.1	34.8	31.8	28.8	1.5	4.5
	생산/기능/노무직	(38)	60.5	39.5	34.2	34.2	0.0	2.6
	사무/관리/전문직	(369)	44.4	46.1	44.7	28.2	0.8	2.4
	주부	(152)	51.3	33.6	30.9	25.7	2.0	4.6
	학생	(40)	42.5	50.0	27.5	27.5	0.0	0.0
	기타/무직	(88)	52.3	31.8	21.6	26.1	0.0	9.1
	무응답	(6)	16.7	33.3	50.0	33.3	0.0	0.0

3)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Q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조정은 실효성이 없어보여서’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27.1%)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15】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조정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라는 응답은 ‘남자’(47.7%), ‘위원회 인지’(56.0%), ‘50대’(64.3%), ‘인천/경기’(5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 %)		사례수	조정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법원의 판단에 더 신뢰가 가 기 때문	게시판 관리자 에게 신고하 는 것이 편해서	기타	무응답
전체		(70)	41.4	27.1	17.1	1.4	5.7	15.7
성별	남자	(44)	47.7	27.3	18.2	2.3	4.5	9.1
	여자	(26)	30.8	26.9	15.4	0.0	7.7	26.9
위원회 인지여부	인지	(25)	56.0	28.0	16.0	4.0	4.0	4.0
	비인지	(45)	33.3	26.7	17.8	0.0	6.7	22.2

(명, %)		사례수	조정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법원의 판단에 더 신뢰가 가 기 때문	게시판 관리자 에게 신고하 는 것이 편해서	기타	무응답
전체		(70)	41.4	27.1	17.1	1.4	5.7	15.7
연령	20대	(18)	27.8	27.8	33.3	0.0	11.1	5.6
	30대	(13)	38.5	15.4	15.4	0.0	15.4	30.8
	40대	(13)	46.2	30.8	23.1	0.0	0.0	15.4
	50대	(14)	64.3	14.3	7.1	7.1	0.0	14.3
	60대 이상	(12)	33.3	50.0	0.0	0.0	0.0	16.7
지역	서울	(12)	25.0	33.3	25.0	0.0	25.0	8.3
	인천/경기	(25)	56.0	16.0	16.0	4.0	0.0	12.0
	대전/충청	(7)	57.1	28.6	14.3	0.0	0.0	14.3
	광주/전라	(6)	50.0	33.3	0.0	0.0	0.0	33.3
	부산/울산/경남	(10)	30.0	30.0	20.0	0.0	0.0	30.0
	대구/경북	(8)	12.5	37.5	25.0	0.0	12.5	12.5
	강원/제주	(2)	50.0	50.0	0.0	0.0	0.0	0.0
학력	중졸 이하	(9)	33.3	55.6	0.0	0.0	0.0	22.2
	고졸	(15)	46.7	26.7	20.0	0.0	0.0	20.0
	대졸	(31)	41.9	25.8	16.1	0.0	12.9	9.7
	대학원졸 이상	(11)	45.5	18.2	27.3	9.1	0.0	9.1
	무응답	(4)	25.0	0.0	25.0	0.0	0.0	50.0
직업	자영업	(8)	87.5	0.0	12.5	0.0	0.0	0.0
	판매/영업/서비스직	(4)	75.0	75.0	0.0	0.0	0.0	0.0
	생산/기능/노무직	(8)	37.5	37.5	25.0	12.5	0.0	0.0
	사무/관리/전문직	(31)	38.7	16.1	25.8	0.0	9.7	19.4
	주부	(8)	12.5	12.5	0.0	0.0	12.5	62.5
	학생	(3)	33.3	66.7	0.0	0.0	0.0	0.0
	기타/무직	(7)	28.6	71.4	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6

위원회 관련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

Q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으로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언론중재위원회 홍보 강화’가 2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재위 역할 관련’에 대한 의견(20.1%), ‘적극, 정확한 업무처리’(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내용		비율(%)
전체		100.0
홍보 강화	홍보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음	26.6
	공익광고를 통해 광고를 해야함	
	국민들이 더 접할 수 있게 홍보 필요	
	많은 홍보를 통해 적극 이용하게 했으면	
	많은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언론피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홍보 필요	
	언론중재위원회 필요성에 대해 어필할 필요가 있음	
중재위 역할 관련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 필요	20.1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적극 홍보해줬으면	
	과다보도에 대해서도 중재위에서 언론기관에 자제 시켜줬으면	
	효율성 있는 운영	
	무엇보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함	
	바른 언론보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을 잘 해줬으면	
	약자(국민)편에서 권리를 찾아줬으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말았으면	
	정정보도가 나갈 경우 인터넷에만 아주 작은 비중으로 표기하지 말고 타언론사에도 2개 이상 보도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중재위 역할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잘 처리해줬으면	20.1
	중재 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형식적인 업무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해줬으면	

※ 없음,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 건수 (n=199)

내용		비율(%)
전체		100.0
적극, 정확한 업무처리	댓글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데 한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적극 대처 해줬으면	20.1
	개인의 사생활이 언론에 의해 심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길 바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줬으면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적극적인 중재역할 필요	
	전후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중재 필요	
	정확한 업무처리	
	적극적인 업무처리	
	정확하고 책임감있는 업무처리	
	중재 요청시 성심성의껏 중재해줬으면	
공정한 업무처리	공정하게 중재를 잘 해줬으면	15.6
	공정하게 평가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공정하게 변론을 잘 해줬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었으면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균형있는 중재 필요	
간편, 신속한 업무처리	중립적인 자세 필요	7.5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일을 해줬으면	
	잘못된 보도는 빨리 수정될 수 있게 해줬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길 바람	
	문제 해결 빨리 해줬으면	
규제/처벌 강화	중재 신청시 절차 간편하게 해줬으면	5.5
	강력한 규제, 처벌 강화	
	강제성 필요	
	법적 구속력 필요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더 강하게 했으면	
	신문기사나 평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한 규제 필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나 대응이 필요	
	잘못된 언론보도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적당한 벌이 꼭 주어져야 함	
	좀 더 강력하게 법적대응이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강화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잘못된 기사가 정정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해야 함	
법 개정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2.5
	어느 한쪽의 의견이 아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함	
기타	침해배제청구권을 꼭 도입해서 언론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2.0
	잘못된 기사의 정정보도는 작게 나오는데 더 크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기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사실무근인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2.0

※ 없음,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 건수 (n=199)

부록

설문지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

ID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랩 조사원 ○○○입니다.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성별	01) 남자	02) 여자			
SQ2. 올해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20세 미만 조사중단)					
01) 20세 미만	02) 20대	03) 30대	04) 40대	05) 50대	06) 60대 이상
SQ3.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I. 기본 설문

문1. 귀하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③ 잘 모른다

문2. 귀하께서 언론보도를 주로 접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① 신문 ② 방송 ③ 인터넷신문
④ 포털 ⑤ 페이스북 등 SNS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문3. 귀하나 귀하 가족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① 언론사에 직접 항의한다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④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
⑤ 기타 ()

문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기사의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5.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정보도 ② 반론보도 ③ 손해배상
④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 삭제 ⑤ 기타(_____)

II.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설문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터넷 매체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해배제청구권'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문6. 귀하께서는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7. 귀하께서는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상의 기사를 수정하거나 보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다소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8. 귀하께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넷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II. 복제기사 관련 설문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는 잘못된 기사가 정정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도 블로그, 카페 등에 이미 전파된 기사가 여전히 남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9. 귀하께서는 잘못된 보도가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10.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를 구제받은 잘못된 보도가 블로그나 카페에 전파된 경우, 그렇게 전파된 기사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V. 댓글 피해 관련 설문

최근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달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인 댓글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심한 경우 댓글을 본 사람이 자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11. 귀하께서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12. 귀하께서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관련 기사댓글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V. 위원회 이용 의사 관련 설문

문13. 잘못된 언론보도와 함께 원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에 전파되고, 기사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 이용하겠다 ② 가능하면 이용하겠다 (→문14로)
③ 별로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④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문15로)

문14. (문13에 ①, ② 응답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 같아서
②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절차가 간편할 것 같아서
④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⑤ 기타 (_____)

문15. (~~문13에~~ ③, ④ ~~응답 경우~~)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법원의 판단에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 ② 게시판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편해서
- ③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 ④ 조정은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 ⑤ 기타 ()

문16.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처리 문항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학원졸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자영업 2) 판매/영업/서비스직 3) 생산/기능/노무직
- 4) 사무/관리/전문직 5) 주부 6) 학생
- 7) 기타/무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일
2016. 10.

조사기관
(주)리서치랩